

“해상풍력은 국가전략사업...선도지역 전남에 정책 지원”

김 총리, 여수서 해상풍력 산업계 정책간담회 공급망 경쟁력 강화·글로벌시장 진출 지원 정부, 하반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출범 예정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해상풍력이 이제 국가 전략사업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상풍력 산업계 정책간담회 인사말에서 “정부가 국내외 공급망 관련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해상풍력은 기자재 제조, 전선 하부 구조, 선박 항만 운영, 유지 보수까지 여러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전략사업이 됐다”며 “해상풍력의 경쟁력은 공급망의 경쟁력”이라고 말했다.

이러 “중동전쟁이 곧 타결이 된다고 하는데, 전쟁이 나고 비상경제 상황을 운영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특별히 더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정부가 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특히 “전남은 국내 해상풍력 본부를 선도하는 지역이고 여수는 그중에서도 핵심 거점”이라며 “공급망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또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체계화하는 등 산업 발전 기반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며 “하러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을 넘어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상풍력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공급망 기업들이 참여해 범정부 지원체계, 항만·선박 등 해상 풍력 인프라 확충, 인허가 지연 및 제도 변경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고, 김 총리는 해상풍력사업에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복잡한 해상풍력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내용의 해상풍력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가 발전소 입지를 미리 선정할 땐 민간사업자를 찾는 ‘계획 입지’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해상풍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 준비 관계기관 간담회에 참석하며 2박 3일 간의 전남·광주 일정을 시작한 김 총리는 이날 간담회에 이어 포스코 광양제철소 전기로 준공식에 참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전남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해상풍력 공급망 콘퍼런스 전시회에서 전시부스를 방문하고 있다. ▶▶▶

선관위국정조사특위 발족...위원장에 국힘 윤상현 민주 9명·국힘 7명·비교섭 2명...45일간 활동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초유의 대규모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1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18명의 특위 위원들이 배정됐다.

여야는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선관위국조특위)를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5선의 윤 의원이 내정됐다. 민주당은 간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지낸 재선 윤건영 의원을 비롯해 김영배·이해석·전용기(이상 재선)·김남희·김성희·김용만·양부남·이기헌(이상 초선) 의원을 내정했다.

국민의힘은 간사에 행안위 간사인 재선의 서범수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재선)·박수민·신동욱·주진우·최보윤(이상 초선) 의원을 배정했다. 비교섭단체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개혁신당은 이준석 의원이 참여한다.

여야는 특위 위원 인선을 포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

▶1면 ‘전남광주 AI 도약’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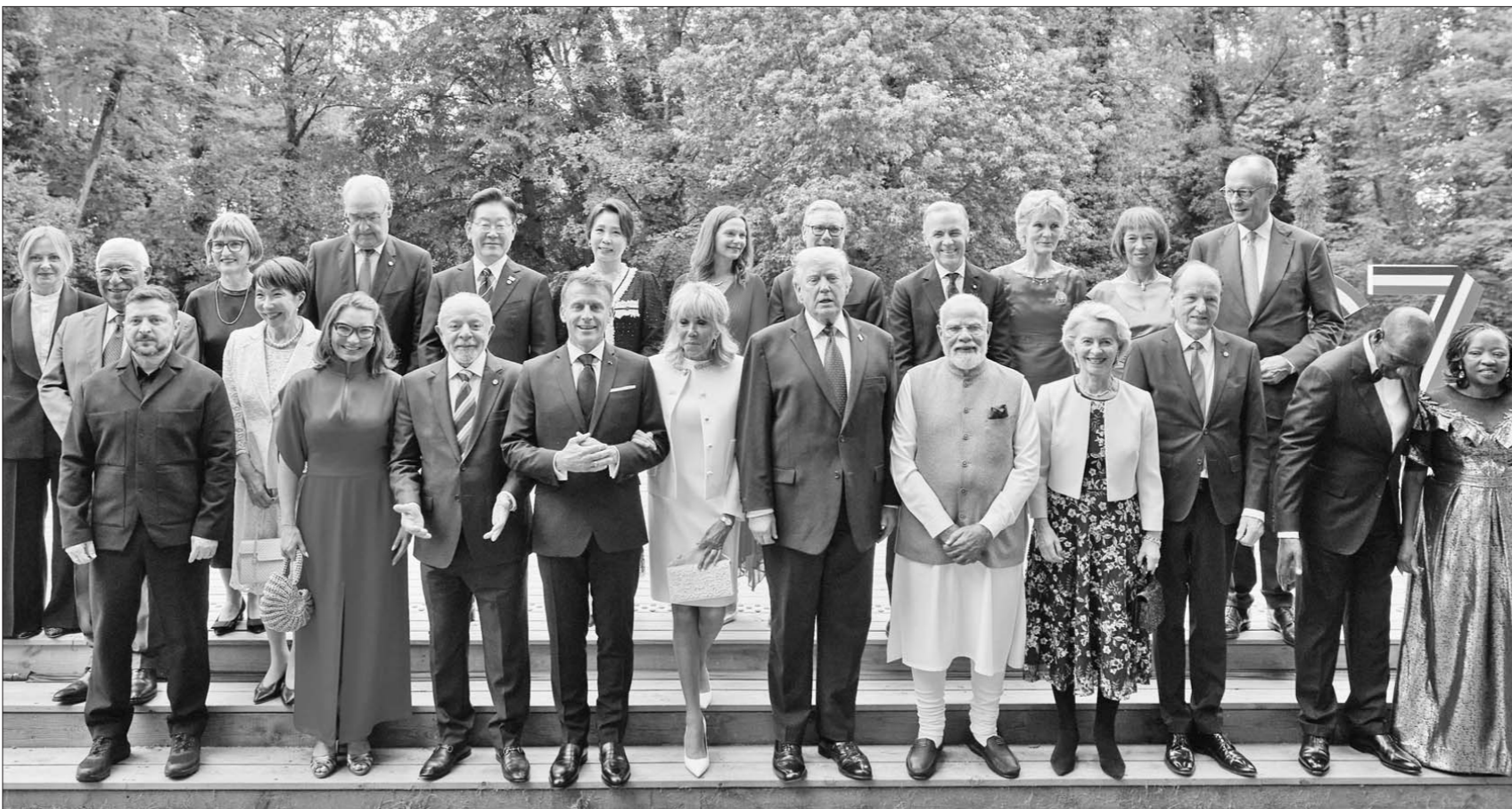
이후 열린 민관협의체 간담회에는 AI 반도체·모빌리티·센서·소프트웨어 분야 기업인들과 한국과학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미래저도빌리티진흥원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AI 실증 기회 부족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민 당선인은 “대통령께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반들이 모이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

축, 신산업축으로 우뚝 설 수 있다”며 “정부와 기업, 연구기관, 지역이 함께 힘을 모아 전남광주 AI 산업의 도약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AI 산업융합집적단지 AI 데이터센터, 실증·창업동, 실증장비, 인재양성 기능을 한곳에 모은 인공지능 산업거점이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과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실증·창업동은 기업 입주공간과 실증시설을 통해 AI 기술의 산업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공식 만찬에 앞서 참석국 정상 부부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이 대통령, G7 회의서 “AI 발전 결과, 전 세계가 공유해야”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 제시...새 개발협력 모델 논의 한영행사에서 트럼프에 “北문제 평화적 해결 주도” 요청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현지시간)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른 결과물을 모든 세계 국가와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 첫 세션에서 “AI 혁명은 인류의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임에도 많은 개도국이 이 기회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러 “각국의 기술 격차가 성장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

를 위해 대한민국은 AI 발전의 혜택을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비전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협력 모델을 통한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개발 수요의 증가에도 공적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만큼 원조와 투자, 기술과 제도가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 원조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를 함께 동원하는 모델을 언급했다.

그 사례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달러의 무상 원조를 바탕으로 5000만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 일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기술 전수를 통해 수혜국의 역량 강화, 기술 및 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성장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에비앙레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마크롱 대통령이 먼저 인사를 건네

자. 이 대통령은 “매우 반갑다(I’m so happy.)”고 화답했고 양측은 미소를 보이며 악수하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이후 행사 참가국 정상들의 단체사진 촬영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찍기 전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고 약 30초간 대화를 나눴다.

밝은 표정으로 트럼프가 얘기하고 이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연출했다.

당시 대화 내용과 관련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의 근황을 물었다”며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해결한 것처럼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청래·김민석, 귀국 이 대통령 ‘마중’

청와대 공지...당정 갈등설 증폭 해소차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등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재명 대통령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가 함께 마중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17일 “내일(18일) 이 대통령 귀국 환영 행사에는

국무총리, 행안부 차관 등 정부 인사와 당 대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이 대통령 출국 배웅에는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배제되면서 당정 간 갈등설이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중앙선거관리 부실 관리 대응 등 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청와대 및 내각 인사 등으로 환송 인원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청와대의 정청래 패스론’이나왔고,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와대가 정 대표의 연임을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갈등이 불거졌다.

이 대통령은 순방 기간 중에 X(옛 트위터)에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고 적었고, 친명(친이재명)계 일각에서는 정 대표 연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육살을 즐긴다고 강한 당이 되지는 않는다”며 에둘러 당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전남광주특별자치 공공기관, 유사·중복 통합...기능 재설계

광주 20개·전남 23개 재편 대상...협의체·TF 집중 논의 민형배 당선인 “통합 서두를 일 아니고 속의 과정 필요”

전남광주특별자치 출범에 맞춰 광주 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기관 구조 개편 방향이 구체화하고 있다.

유사·중복 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하되, 단순 구조조정이 아닌 통합특설 체계에 맞는 기능 재설계가 목표다.

1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 산하에는 공사 3개, 공단 1개,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5개 등 20개 공공기관이 있다.

도는 공사 1개, 출연기관 22개 등 23개 공공기관을 두고 있다.

다음 달 통합특별자치 출범 이후 이들 기관은 통합을 원칙으로 기능 재조정 방안이 논의된다.

유사 중복 기관은 단일화하는 통합형, 본부·지역 센터형(조직 통합·현장 유지), 기능 분담형(기관 유지·역할 재배치) 등 유형별 개편이 검토된다.

광주와 전남의 공공기관은 현재 설립 기준, 조직, 인사, 보수, 회계, 사업 기능 등이 상이하다.

통합을 위해서는 설립 기준을 통일하고 보수·인사 평가 체계 일원화, 예산·출연

기준 조정, 성과관리 통합 등도 선행돼야 한다.

공공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기관별로 통합 의견을 수렴하고 정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 통합 준비 태스크포스(TF)도 만들어 인력 승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전문기관의 조직진단 용역도 이뤄진다.

도출된 정비안을 토대로 통합 방향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 검토 대상은 기능 중복도가 높은 광주 12개, 전남 13개 기관으로 파악된다.

광주·전남연구원과 광주도시공사·전남개발공사는 ‘지역발전’ 분야로 기능이 유

사하다.

“인재복지” 분야에서는 각각의 사회서비스원, 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함께 묶인다.

‘경제산업’으로 테크노파크와 신용보증재단, 광주상생일자리재단·전남일자리경제진흥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전남의 녹색에너지연구원·환경산업진흥원이 유사 중복 기관이다.

문화재단과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관광공사·전남관광재단은 ‘문화관광’ 분야 유사 기관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관은 ‘통합 공사’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선인은 통폐합을 긴급하게 할 것은 아니고 속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당사자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능 조정, 인력 배치 등 현안을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